

尹대통령 조여오는 수사망...사상 첫 출국금지·체포 검토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경찰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검·경·공수처, 경쟁적 수사

12·3 비상게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 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국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

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비상게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게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게임이 정당한 행위였다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상민 前장관 소환 통보

'12·3비상게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게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총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총암파'로 불

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이 9일 무안군 남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

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해...모두 제 책임"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원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번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뒤 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 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복합'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임장 밝히는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부터 함의하라

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놨다.

김 단장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제 기억에 4·5월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령관이) 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날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비상게임' 주요 수사대상자

주요 혐의 내용, 주요 고발 혐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윤석열 대통령 아당의 계속된 정부관료 탄핵소추안 발의·간섭 예산안 강행처리 등의 이유로 비상게임 선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대통령에게 비상게임 선포 건의, 계엄군 국회 진입 작전 지시,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관에 위헌 논란 '포고령 1호' 전달, 중앙선거위에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 투입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비상게임 포고령 발표, 경찰청장에게 국회 전면출입통제 요청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 사전 모의·옹호	조지호 경찰청장 국군방첩사령관 전화받고 선관위에 경찰인력 투입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 출입 통제, 국회 주변 기동대 배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선관위에 병력 및 요원 파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계엄군 병력 동원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계엄군 병력 동원

野, 법사위서 '내란 상설특검'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게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사건

대신 '범죄혐의 사건'으로 용역 수정을 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게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

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

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합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

'계엄 사태' 일반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 3방향

일반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전망)	12월 5일 민주당, 추진 공시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국회 제출 9일 야당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전망)	12월 5일 개혁신당, 원내 정당들 국정조사 참여 촉구 9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예고
내용 계엄사태 관련 일체 의혹 수사 특검 특별검사 추천에서 국회 배제 특검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 대통령 3명 중 1명 임명	주요 수사 대상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박안수, 비상게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및 한덕수, 여인형, 추경호 등 특검법도 의 특검법 없이 국회 본회의 수사 요구안 가결만으로 즉시 가동 가능,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일반 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 없음)	배경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국민의힘 안동훈 대표와 학교 동문인 정동수 수사 진정성에 의구심·검찰 불신 작용 한 대표 가 법무부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을 근거로 내란·직권남용 수사, 경찰 특검 중심 진상규명 필요 ('내란죄'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의 수사 요구안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게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집행 등에 관한 법률안

▶ 1면 '쌍둥이 포고령'서 계속

이들은 "군대를 불법 동원해 주권자 국민을 공격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남은 것은 탄핵과 체포,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 치인들의 상황 인식과 행동이 참으로 처참하고 개탄스럽다"며 "반헌법 정당

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지방의원 8명은 삭발식을 갖고 윤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 힘의 탄핵안 의결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삭발한 지방의원은 서울용구시 의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안흥주 서구의원, 오영순 신증축 남구의원, 김영순·정달성 북구의원, 박혜원 광산구의원이다.